

2022 10 vol.78

재난안전

Brief

정책 Brief

-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3
• 조류인플루엔자(AI) 겨울철 도내 유입 대비 철저	04
• 청주시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만든다	05
• 진천군, 농업인 안전보험·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05
• 괴산군, '2023년 재해예방사업 15곳, 국비 104억 확보	06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지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07
• 충주시·충주경찰서, 여성안심반딧불이존(ZONE) 2호 조성	08
• 청주시 도시침수예방사업 '착착'	09
• 영동소방서, 필로티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	10
• 보건환경연구원,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1
• 디지털트윈 공간정보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한다	11
• 빅데이터 분석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인다	12
• 행안부,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본격 추진	13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14
•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15
• 청소년 알코올 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캠프 개최	16
•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17
• 소방청, 반지하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화 추진	18
• 가을·겨울철 어선사고예방, 안전점검으로 더욱 철저히	18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19
• 행안부, 겨울철 재난 대책을 위해 선제적 재정 지원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울산 남구,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 추진	21
• 군산시, '여성 1인 점포'와 가구 범죄 예방 사업 추진	21
• 서울시, 강우처리목표 최대 110mm 상향...첨단 수방시스템 구축	22
• 대덕구, 주거침입 범죄 예방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23
• 서울시, 동절기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24
• 서산시, 화재 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추진	25
• 충남도, 가을·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 힘 쏟는다	25
• 세종시 부강면, 화재취약가구 자동화산소화기 35대 설치 지원	26
• 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 최초 채용 배치 추진	26

■ 집필진

배민기 센터장 (043-220-1127)

최신실 연구원 (043-220-1118)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주 소 |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420호

홈페이지 | www.cri.re.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sri_cri

재난안전 Brief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주요 재난안전 정책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적시하고 그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월간지로서 충청북도 및 충북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홈페이지 (www.cri.re.kr)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 겨울철 도내 유입 대비 철저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 겨울철 시베리아 등 철새 번식지에서 감염된 철새에 의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새도래지(미호천 등 6개소) 소독강화 및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10월 1일부터 운영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55개국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혈청형 H5N1, 97.8%)가 발생했고, 7월 한 달 동안 450건 발생으로 전년 동기 102건 대비 3.4배 증가
 -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지난 7월 청해성 야생조류(갈색머리갈매기)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일본, 필리핀 및 대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
 -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을 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가금농장 방역 지도·관리 강화를 위한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 방지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
 - 축주 자신이 스스로 방역책임자가 되어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농장 출입자 차량·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도 자제해 줄 것 당부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동물위생시험소

☎ 043-220-6251

◆ 일자

2022. 10. 1.



청주시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만든다

○ 주요내용

- 청주시는 향후 5년간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청주시는 지난 7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교통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주시의 향후 5년간(2022~2026년) 교통안전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제시
 - 교통안전 기본계획으로는 2020년 대비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48% 감소를 목표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 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문화 등 4개 추진전략 제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는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목표로 무장애 교통시설 확충, 무장애 도로환경 개선 등 4개 추진전략 제시
 - 해당 계획별 추진전략에 맞춰 도로환경개선,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 안전관리 강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논의

진천군, 농업인 안전보험·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주요내용

- 충북 진천군은 예산 10억 8천만 원을 확보해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은 진천군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87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지원하고, 보험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고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35%만 부담
 - 보장은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유족급여금 등 9종이며, 보장금액은 일반1,2,3형 및 산재형으로 세분화되며, 군은 또 올해까지 약 2천60명의 농업인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
 -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는 보험으로, 올해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원예시설, 사과, 배 등 67개 품목이며 판매시기에 맞춰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
 - 군은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85%에서 군비 5%를 추가해 90%까지 확대 지원하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10%만 부담

◆ 지자체

청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34454>

◆ 일자

2022. 10. 10.

◆ 지자체

진천군

◆ 출처

충청매일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003#09SX>

◆ 일자

2022. 10. 11.

괴산군, '2023년 재해예방사업 15곳, 국비 104억 확보

주요내용

- 충북 괴산군은 2023년 재해예방사업으로 15곳에 올해 대비 9% 증액된 국비 104억 원을 포함 사업비 208억 원 확보
 - 재해예방사업은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급경사지 붕괴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에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실행
 - 2023년 선정 지구는 도정, 중리지구 등 2곳(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보강, 신월, 원풍, 구룡, 압향, 안민지구 등 6곳(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검승2, 유하지구 등 2곳(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진1천, 삼거리천, 박촌말천, 광덕천, 목동천 등 5곳(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구성
 - 우선 군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도정지구에 14억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중리지구 1곳에 39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보강지구에 19억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신월지구 등 5곳에 109억 원을 투입해 제방·호안시설, 교량, 보 및 낙차공 등 노후 및 유실 시설물을 정비해 하천 범람 및 저지대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
 - 이와 함께 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신규사업으로 괴산을 검승리 검승2지구에 5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하지구 18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낙석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 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
 - 그리고 군은 소하천 주변 주거지가 다수 위치하고, 경사가 급해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 수위가 빠르게 상승해 주민대피 시간이 부족한 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수진1천, 삼거리천, 박촌말천, 광덕천, 목동천 등 5곳에 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

· 지자체
괴산군

· 출처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9500>

· 일자
2022. 10. 11.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지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조기 예측 가능 -

○ 주요내용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 지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 원인체를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발생 가능지역과 유행 양상을 분석 및 예측하는 사업을 의미
 - 하수를 통해, 무증상자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를 검출함으로써 유행확산을 1~2주 앞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 양상 파악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를 적극 활용
- **현재,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하수처리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감시 대상 병원체 10종(코로나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8종)에 대해 주 단위 감시사업 운영
 - 하수 기반 역학은 기존의 전수 감시나 임상 감시로 확인되지 않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조기 인지가 가능하며, 향후 하수 샘플 채취 지점을 확대하고 감시 대상 병원체를 다양화하여 충북 도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유행 차단에 기여할 예정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충북보건환경연구원

☎ 043-220-5924

◆ 일자

2022. 10. 12.



충주시·충주경찰서, 여성안심반딧불이존(ZONE) 2호 조성

○ 주요내용

- 충주시는 충주경찰서와 21일 봉방동 상방 8길 일원 250m 구간에 '제2호 여성안심반딧불이존(ZONE)' 조성
 - 여성안심반딧불이존은 여성·아동·노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의 증가에 따라 조도 개선이 필요한 곳에 태양광 바닥 조명등을 설치해 누구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
 - 설치 골목에는 여성안심반딧불이존 거리표시 도색을 실시해 안전한 환경 조성 도모
 - 2호 반딧불이존은 지난 7월 조성된 문화동 연못길 제1호 여성안심반딧불이존에 이은 두 번째 여성안전귀가를 위한 사업으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
 - 경찰서가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는 주민 설명과 홍보를 통해 사업 완료
 -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지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지자체
충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36177>

◆ 일자
2022. 10. 23.



청주시 도시침수예방사업 ‘착착’

주요내용

■ 청주시는 도시침수로 인한 시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침수예방사업 추진

- 시는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내덕분구, 석남천분구, 우암분구, 수곡분구, 가경분구, 명암분구, 영운분구, 사직분구, 운천분구 등 9개소 구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
- 내덕, 석남천 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착공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암, 수곡, 가경 배수분구 등 3개소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
- 영운과 명암분구 2개소는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며, 시는 사직, 운천 분구 2개소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현장실사를 마쳐 이달 중 환경부 최종심의 대기
- 시는 해당 사업이 집중호우 시에도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안전 중심의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신청한 사직 배수분구, 운천 배수분구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과 향후 침수 예방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침수피해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



출처 : 연합뉴스

◆ 지자체
청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36416>

◆ 일자
2022. 10. 24.

영동소방서, 필로티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

○ 주요내용

■ 충북 영동소방서는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강화

- 필로티 건축물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개방된 구조로 1층에서 불이 나면 화염과 연기로 인해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려운 상황
- 또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해 방화담배꽂초 등에 의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으로 화재 발생 때 벽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 증가
- 이에 영동소방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인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추진
- 주요 내용으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현황 실태조사, 외부 출입구 소화기 설치 권고, 비상구 및 소방시설 인근 적치물 제거, 관계인 피난 대피요령 및 초기 화재진압 교육 등으로 구성

◆ 지자체

영동군

◆ 출처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689>

◆ 일자

2022. 10. 25.

보건환경연구원,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오수의 적정처리 유도, 물환경 및 공중위생 향상 도모 -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휴가철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계획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 야영장 38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4 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부적합율은 10.5 %로 확인
-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주나 건물주에 의해 관리되어 관리 소홀, 처리 시설 용량 부족, 고장 난 시설 방치 등의 이유로 부적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충북 도내에는 글램핑장과 자동차 야영장 등을 포함하여 총 173 개소의 야영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야영장들은 발생한 오수를 자체적으로 정화 처리해 수계에 방류
- 여름철에는 야영장 이용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오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시간대에 따른 발생량 변동 폭이 크고, 화장실 이용과 세제 사용으로 인해 유입 오수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 오수처리에 주의 요망
- 특히, 하천 주변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야영장이 많아 오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주의 요망
- 연구원에서는 정확한 시험을 통한 검사 결과 제공으로 야영장 발생 오수의 적정 처리 후 수계에 방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적합 행정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보건환경연구원

☎ 043-220-5963

◆ 일자

2022. 10. 2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디지털트윈 공간정보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한다

- 국토부, 환경부 AI 홍수예보 시범구축에 고정밀 공간정보 지원 -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연계 AI(인공지능) 홍수예보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제공, 예측모형 고도화 등에 적극 협조
- 환경부는 지난 8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도림천(신림동) 유역에 대한 디지털트윈 연계 AI 홍수예보 체계 시범구축
-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예측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3차원 지형, 건물 입체모형, 하수관로 등의 고정밀 공간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자체 구축 또는 수집관리 중인 공간정보의 활용을 환경부와 협의
- 디지털트윈 구축에 활용되는 3차원 공간정보에는 수치표고모형(1m), 정사영상(12cm), 3차원 건물 정보(LOD4) 등이 있으며, 특히 강우량뿐만 아니라 배수 유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서 구축한 하수관망 상세정보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 기 보유중인 3차원 공간정보를 환경부에 우선 제공하고, 최신 자료로 갱신이 필요한 공간정보는 올해 안으로 갱신 작업을 완료하여 추가로 제공



- 1)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 지표면의 높이를 일정 간격(1m/5m)으로 측량하고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자료
- 2) 정사영상 :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지형지물보정, 색상보정 등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영상 형태의 지도(도심 12cm/비도심25cm)
- 3) 지하공간통합지도 : 지하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를 위해 16종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의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3차원 지도로 구축

-3차원 공간정보의 제공 외에도 양 부처 간에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예측모형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모색

-이를 위해 양 부처 합동으로 기존 추진사업* 사례 공유, 전문가 자문 등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10.18)할 예정

* (환경부) 도림천 유역 디지털 트윈 구축 계획(수자원공사)
 (국토부) 곡교천/운양천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사업(아산시)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65

◆ 일자
2022. 10. 11.

빅데이터 분석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인다

-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등 60곳 특별점검 실시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 실시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
 - * (2019년) 3,349명 / (2020년) 3,081명 / (2021년) 2,916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센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7.6명)보다 2배 이상 많고, 또한 2021년 전체 보행자 사망자(1,018명) 중 노인이 절반 이상(601명, 59%)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시급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전통시장·노인보호구역 위치 등의 데이터와 교통사고 다발 위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총 60개소의 점검 대상지 선정
 - 점검 대상에는 '21년 발생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 포함
 - 이번 관계기관 특별점검 시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여 연말까지 개선 권고하고,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지원도 할 계획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43-719-4229

◆ 일자
2022. 10. 11.

점검대상별 빅데이터 분석 · 활용방안



행안부,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3~'27년) 수립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 마련해 추진

-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의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

■ 먼저 국민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 체험교육 위주의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로 국민의 안전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 교육 추진 기반을 추가 확충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

- 생애주기별로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법·제도 정비
- 안전교육 콘텐츠·교재, 안전체험관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도부터 운영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68개 안전 세부 영역별로 교육부 등 22개 중앙 부처를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하여, 주관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책임 있게 실시할 계획
- 각종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 지역 편차 없는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수요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인력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
-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분야별, 생애주기별로 부족한 분야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콘텐츠 등 교육자료는 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등에 통합 제공하여 공동 활용할 예정
-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안전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공공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

■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시작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3년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

- 추진 실적에 대해 자체평가 및 행정안전부 실태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044-205-4271

◆ 일자

2022. 10. 11.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2일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족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원양)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방역 강화

- 지난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원양 18마리)에서 채취한 시료 중 그중 1마리의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0월 12일에 검출
 - 올해 3월 2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지막으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이후 7개월여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작년 야생조류에서 10월 26일에 검출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6일 정도 빨리 검출되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
 -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봉강천과 인근 철새도래지 집입로 등에 출입 금지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통제초소 설치·운영
 - 봉강천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을 시행하여, 축산차량 및 관계자 외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 제한
 - 발생지역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 추진
-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있는 밀집단지(천안 용정단지)는 전용 소독차량 별도 지정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

■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즉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 강화

- 첫째,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 둘째,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615호)과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254호)의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가금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월 1회 → 월 2회)하여 운영
- 셋째, 모든 가금*의 출하 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 (현행) 오리, 노계, 전통시장 출하 가금 → (변경) 육계 포함 모든 가금
- 넷째,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지속 점검 실시
- 다섯째,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전담관(3,944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5

◆ 일자

2022. 10. 12.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 건물 규모 큰 특급·1급·건설현장 대상물의 전문적 소방 관리 목적 -

○ 주요내용

-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한층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
 -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으로 구성
 - 현재는 타(他) 분야(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큰 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 또한,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
 -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필수
 -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을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

◆ 주관부처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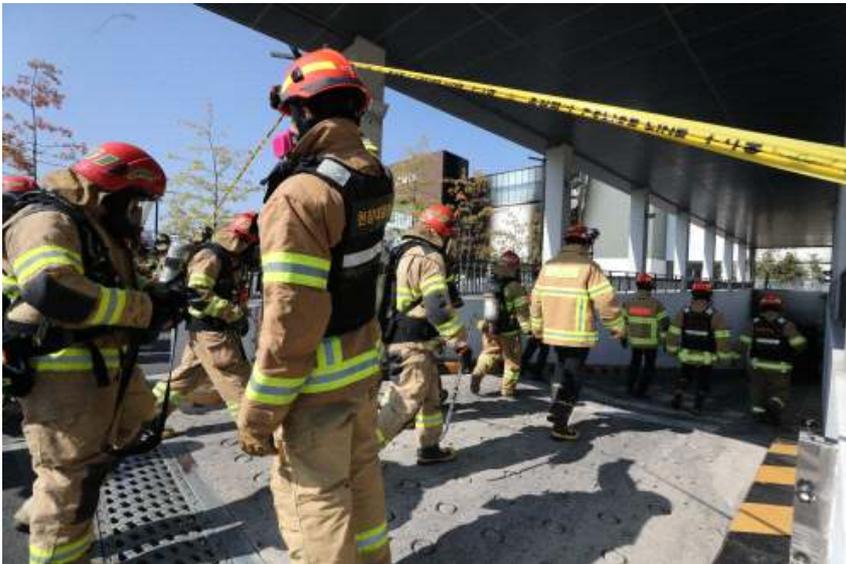
◆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42

◆ 일자

2022. 10. 12.



출처 : 아시아투데이

청소년 알코올 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캠프 개최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치유캠프 시범운영(10.17~10.28) -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박 12일 동안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캠프 개최

- 최근 조사에 따르면 '21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11명(10.7%)이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의 음주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대 청소년의 고위험 음주**의 경우 '17년 39.8%에서 '20년 66.5%로 약 67% 증가하는 등 10대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 현재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교육부·질병관리청)

**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용어로 과음, 만취, 폭음과 같이 건강에 해가 되는 수준의 음주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식약처)

- 성장기 청소년의 음주는 적은 양의 술도 성인보다 더 해로우며 담배 등 다른 유해물질에 중독되기 쉽고, 성인기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기부터 적극적인 예방과 치유 필요

■ 이번 치유캠프 참가자는 중·고교 청소년 24명으로 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 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선정하고, 알코올 중독 문제의 예방·치료를 위한 자기 조절 훈련, 개인 맞춤형 및 집단 상담·치료 진행

- 알코올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 학교 부적응, 비행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대인관계를 회복하고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캠프 종료 후에도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치유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치유시설로서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으로 운영되며 2012년 개원 이래 약 7천 5백여 명의 청소년이 치유 과정에 참여

- 최근 3년간 입교청소년의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 우울·불안·강박증 등 위험지수*는 평균 23.2% 하락하고, 자기만족도·자긍심 등 긍정지수는 평균 16.5% 상승해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이는 추세

*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규칙위반, 공격행동 등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5

◆ 일자
2022. 10. 14.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운영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 운영

-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한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계획

■ 정부는 '현장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으로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로 인한 터널 진·출입로 등 교통 정체 및 고립을 방지하고, 제설 미흡으로 보행로·이면도로 등 통행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 주문

- 먼저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하여 국민께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발상황과 우회도로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까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 또한 자동차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하여 집중관리 하고,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의 제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제설 장비를 확대 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 지난해 염화칼슘·소금 수입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제설재 확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기관별 월별 구매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설재 비축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염화칼슘] '20년16~18만원 → '21년30~40만원 → '22년 9월28~36만원,
[소 금] '20년5~6만원 → '21년10~12만원 → '22년 9월10~14만원

- 아울러 국내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지(배터리) 방전 등에 따른 차량 고립에 대비하여 전기차 전용 견인 차량을 권역별로 확보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별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증설**하는 등 비상 시 협업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 국내 전기자동차(9월 기준) 286,258대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 860대 → '22년까지 약 1,100대 설치 계획

■ 더불어 지자체·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재조사, 다채널 실시간 재난 안전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적설취약구조물, 적설취약도로, 고립예상지역, 상습결빙구간 등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 044-205-5236

◆ 일자
2022. 10. 16.

소방청, 반지하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화 추진

- 장애인·홀몸어르신 등 무상보급 시 반지하 주거시설 거주자 우선 보급 -

○ 주요내용

■ 소방청은 화재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주거시설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 강화

-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30살 남성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
- 이 주택에는 화재경보기가 없어 뒤늦게 화재 사실을 파악했었던 것으로 확인돼, 소방청 차원 차원에서 유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
- 주요 내용으로 반지하 주택 보급 기반 마련과 구매·설치 등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고, 지자체·민관 협업으로 화재경보기 반지하 주택을 우선 보급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 반지하 거주자 등에게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확인하고 고지토록 집중 홍보할 계획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생활안전과
☎ 044-205-7662

◆ 일자

2022. 10. 19.

가을·겨울철 어선사고예방, 안전점검으로 더욱 철저히

- 10.24.(월)~12.16.(금), 전국 11개 시·도에서 일제 점검 실시 -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24일(월)부터 12월 16일(금)까지 연근해어선과 뉘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다. 중앙해양 안전심판원의 2021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의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9명)의 66.3% 차지*

* 인명피해('21) : 가을(34.8%/31명) > 겨울(31.4%/28명) > 봄(16.9%/15명) > 여름(16.9%/15명)

-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실 방열조치,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해상추락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도록 지도할 계획
- 특히 뉘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 락(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
- 이 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지도할 예정

◆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6

◆ 일자

2022. 10. 21.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

-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
-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즉각 시행

■ 첫째,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의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에스피씨(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 안전보건 기획감독 실시

- 우선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 주 중 감독 대상을 특정하여 불시에 감독할 예정

■ 둘째, 에스피씨(SPC) 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

-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
-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

■ 셋째,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 강화

-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천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팅 터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

■ 넷째,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 추진

-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03

◆ 일자
2022. 10. 23.

행안부, 겨울철 재난 대책을 위해 선제적 재정 지원

-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비, 한파 대책비에 재난안전특교세 138.76억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8.7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

- 이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78.76억, 한파 대책비로 60억 원을 각각 지원

- 우선,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는 지난 절기('21년 10월~'22년 2월) 대비 가금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일이 약 3주 정도 빨라짐*에 따라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지원

* 2021년 11월 8일 → 2022년 10월 17일

- 특히, 올해 유럽·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2.1% 증가하여 철새 간의 교차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아 철저한 차단 방역 필요

-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 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류독감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10.12.)에 따라 「조류독감(AI) 대책지원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 가금 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태세 준비상황을 점검

■ 다음으로, 올겨울 추위를 대비하여 한파 대책비 60억 원 지원

- 올해 말까지 라니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첫 한파특보가 지난 10월 17일 발령되었고,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첫서리가 내리는 등 올겨울 평균기온은 어느 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설 및 대응 태세 전반을 사전 점검 하는 등 각종 대책 마련

* 동태평양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는 현상으로 라니냐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한파 대책비는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피해 저감 시설 확충,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 지급 등에 사용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044-205-5125

◆ 일자
2022. 10. 24.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울산 남구,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 추진

○ 주요내용

- 울산시 남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안전귀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남구는 관내에 설치된 1891대의 CCTV와 울산광역시형 도시안전망을 활용해 CCTV영상 긴급지원, 112·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각종 범죄와 재난 등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여성이나 아동이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급상황을 보호자와 경찰에 통보하고, 사건 발생 시 주변 CCTV영상을 곧바로 경찰에 전송
 - 남구는 현재 안전귀가 시스템을 동구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울산 전 지역으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
 - 이와 함께 축적된 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

군산시, '여성 1인 점포'와 가구 범죄 예방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군산시는 여성 1인 점포와 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벨' 설치와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 추진
 - 최근 여성 대상의 스토킹, 주거침입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점포와 1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측면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
 - 특히,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사업'은 비상벨을 설치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상황에서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 진행되며, 관내 100개소가 설치대상으로 여성 1인 점포 누구든 신청 가능하고, 다만, 본인 소유 점포 제외.
 -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여성 1인 가구 및 모자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 3종 (동작감지기,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지원

◆ 지자체

울산광역시

◆ 출처

뉴스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4_0002035893&cID=10814&pID=10800

◆ 일자

2022. 10. 4.

◆ 지자체

전라북도 군산시

◆ 출처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8571>

◆ 일자

2022. 10. 6.

서울시, 강우처리목표 최대 110mm 상향...첨단 수방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서울시는 10년 만에 강우처리목표를 시간당 95mm에서 최대 110mm로 상향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방 시스템 구축 추진

-서울시는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2022~2032)'을 발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수방 종합대책으로 크게 강우처리목표 재설정, 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예측 기반 시스템 구축, 반지하 거주민 등 침수취약가구 안전 강화, 공공·민간 안전시설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17개 대책 추진

■ 먼저 2012년 설정한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를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상향 조정하고, 침수취약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110mm까지 상향

-특히 지역별 호우발생빈도, 기왕최대강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등 수리수문학적 특성과 유동 인구, 과거홍수 피해액, 정주형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 하천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 목표를 탄력적으로 적용

-2032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 등 침수취약지역 6곳에 총 18.9km 길이의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수우려지역에 2조 원을 투자해 빗물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조 신설, 하수관거 정비, 하천단면 확장 등 상향된 목표에 맞춰 지역별로 방재시설 확충

■ 시민들의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침수상황을 측정·전파하는 스마트 경고시스템을 내년 5월 시범 도입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일반도로 등 주거지역에 전국 최초로 침수예·경보제 도입

-아울러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예측하는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 구축

■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위기 상황에 긴급대피가 어려운 재해약자가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세대에 돌봄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 시설 점검부터 대피정보전파, 복구까지 맞춤 지원

-또 주택위치, 침수이력과 상관없이 반지하 주택 거주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

■ 연말까지 맨홀 1만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최근 침수 때 수요가 급증한 양수기는 내년 우기 전까지 1만 9000대를 추가 배치

-내년 5월까지 지하철 모든 역사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차수 시설 의무화 추진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더팩트
<http://news.tf.co.kr/read/ife/1969600.htm>

◆ 일자
2022. 10. 6.

대덕구, 주거침입 범죄 예방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주요내용

■ 대전 대덕구는 주거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중리근린공원 인근 단독·다세대 주택 235가구를 대상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포

-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대전시 주관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에 선정된 ‘내 일상이 안전한 대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지 침입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
- 이날 최충규 대덕구청장과 이정수 대덕경찰서장, 인근 구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문제에 함께 대응
- 현장에는 범죄자의 침입 흔적을 보존해 범인 추적이 용이한 특수형광물질을 담벼락, 가스배관 등 주거지 침입범죄 경로에 도포하고,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한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 안내판과 로고젝터도 설치



◆ 지자체
대전광역시

◆ 출처
충청뉴스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993>

◆ 일자
2022. 10. 11.

서울시, 동절기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 주요내용

-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는 동절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셀프주유취급소' 불시단속과 동시에 선제적 위험물 안전관리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셀프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 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56개소이던 셀프주유취급소는 지난 9월말 기준 257개로 증가해 해당 기간 중 6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주유취급소는 오히려 192개소가 감소
 - 또한 전체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주유취급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8년 24.3%에서 현재 46.7%로 해마다 증가
 - 다만 셀프주유취급소는 주유원이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일반인이 주유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취급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안전관리 불시 단속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검사요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번 단속을 통해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
 - 아울러 위험물·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취급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도 함께 확인하고, 이밖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교육 실시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매일안전신문
<https://idsn.co.kr/news/view/1065571879526536>

◆ 일자
2022. 10. 12.



서산시, 화재 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충남 서산시는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대형 피해 사고가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하고자 마련
 -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으로 구성
 - 지원금액은 최대 2천 600만원이며, 국비와 시비 각각 1/3을 지원하고 나머지 1/3은 신청자 부담
 -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에 사용된 공사비용을 지원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보강계획을 수립해 서산시 건축허가과로 제출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시민 안전을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은 올해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하며, 올해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충남도, 가을·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 힘 쏟는다

○ 주요내용

- 충남도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수부와 고용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과 합동 안전 점검 추진
 - 충남도는 어업 활동 증가와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명피해 및 대형사고 위험이 큰 가을·겨울철의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기관과 힘을 합칠 예정
 - 점검 대상은 도내 등록어선 5640척 중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에 정박한 어선으로, 항·포구별 30척을 현장에서 무작위로 골라 점검할 계획
 - 합동 점검반은 기관실 배전반 상태, 구명설비 비치 여부, 소화기 작동 상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각종 선박 전등, 기적 장치, 위치 발신 장치 등 항해·통신 장비와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기 상태, 밧줄 손상 여부 등도 확인
 - 낚시어선은 구명조끼 관리 상태, 출입항 신고 이행, 승객명부 비치 여부, 출항 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도할 계획이며 점검 후 '낚시시설 안전 점검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

◆ 지자체

충청남도 서산시

◆ 출처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092>

◆ 일자

2022. 10. 13.

◆ 지자체

충청남도

◆ 출처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3412>

◆ 일자

2022. 10. 23.

세종시 부강면, 화재취약가구 자동확산소화기 35대 설치 지원

○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부강면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을 대비해 화재 취약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사업 시행

-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돼 화재 초기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로, 부강면 의용소방대는 화재에 취약한 농가주택의 기름·연탄 보일러 난방 가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
- 화재취약가구에 설치할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 단독주택 가구에 설치해 인명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익명의 기탁자로부터 35대를 기부 받아 마련



제주도, 향만안전점검관 최초 채용 배치 추진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향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향만 안전관리체계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향만안전점검관을 채용해 배치 추진

- 지난해 8월 제정된 향만안전특별법은 하역·출입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하는 향만의 특성에 맞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
- 이 법에는 향만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향만안전점검관 도입 등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제주도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향만안전을 총괄할 향만안전점검관 도입
- 향만안전점검관은 향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과 이행여부 확인, 시정조치 등을 전담

◆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567>

◆ 일자
2022. 10. 25.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44306>

◆ 일자
2022. 10. 26.



New Chungbuk, Joyful people

2022년 10월 CSRI 재난안전 Brief